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 발표

비대위,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윤리특위 강제력 강화 등 추진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결정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일괄 발표했다.

비대위는 그간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자진 출석이 불가능한데, 특히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

동폐기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 방침을 의결했다.

박 총장은 "세비동결과 함께 금년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 정도 성금을 각출해서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총장은 세비 동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의총에서 추진받아야 하지만 동결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대위는 논란을 사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일 법률지원단을 조사관으로 해,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뒤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박 총장은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비대위 보고하고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셀프 후원' 논란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 후원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좌직원의 경우 재직기간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윤리특위의 법적 구속

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국회윤리특위 밑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이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분들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징계안에 회부되는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심사기간 60일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공식 출범 운영위원장 송지용 의원 선출

제10대 전북도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짓고 공식 출범했다.



송지용 의원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송지용 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조 창구로서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여겠다"면서 "이를 위한 조직 신설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분야별, 전공별, 연구회별 전문가를 초청, 맞춤형 전문 지식 제공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의 정책기능을 보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겠다"며 "아울러 홍보관 리뉴얼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송지용 위원장과 강용구·이도영·이해숙·정진세·정호윤·최영규·최영일·최은희·최인정·허남주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고민형 기자

더민주 '최경환, 처남 채용 낙하산 임명 의혹... 중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할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엄정한 기준으로 조속히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의 원실에서 근무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낙하산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씨는 연봉 2억여원이 넘는 고위직임에도 2015년 10월 당시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의 매제인 장씨의 경우 1985년 8월부터 김일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17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용에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밝힌 것처럼 장씨는 2014년 9월1일자로 최 의원 보좌관직에서 퇴직했으며 정당한 공보 절차를 거쳐 같은달 9월17일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취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보좌관으로 등록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급여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미안합니다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명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 감사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당 손학규 리브콜에 더민주 반발

박지원 '당에 들어와 안철수와 경쟁하라'... 정장선 '위기 때 대안 의도 순수하지 않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이 3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영입 의사를 재차 밝히자 더민주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강진에 계신 손학규 전 고문에게도 안철수 전 대표나 제가 많은 리브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함께 안철수 전 대표와 경쟁도 하는 그런 구도가 이뤄지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손 전 고문이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 아니잖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더민주엔 문제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으로 와서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 전 고문이 당적을 두고 있는 더민주에서 불만이 나왔다.

정장선 더민주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위기가 생길 때 손 전 고문

을 대안으로 자주 거론하는데 나는 그런 것은 순수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기에 이런 경향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은 좀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 여부에 관해선 "곧 정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과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송영길 '대표되면 이해찬 복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대표 선거와 관련, "나는 비주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당내 비주류 표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나는 (더민주 내 중도성향 중진모임인) 통합 행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비주류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시키려고 했다. 친노 세력과 관계도 나쁘지 않고 비주류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관해선 "이해찬뿐만 아니라 홍의락까지 같이 복당시켜야 한다"며 "지금 (복당)했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김중진 체제에선 (김 대표) 본인이 (공천 배제)를 결정했으므로 반복 안하려고 하겠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의 전 당대회 후 역할에 관해선 "상임고문으로 모셔서 잘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해선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실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당 재정 운영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이런 리베이트 같은 편법이 나오도록 한 것은 당대표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자진 탈당' 압박에도 버티는 김수민·박선숙

탈당 거부로 의원직 유지하며 의정활동 '올스톱' 관련 비난 목소리

이른바 '김수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30일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들이 탈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의정활동도 중단한 채 배지만 달고 있는 두 의원들의 행보에 세간의 눈총을 사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29일 *뉴스와이어*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 정서가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둘에게 차라리 신변정리를 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KBS라디오 '안영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본인들이 스스로 탈

당을 해주지 않는 경우 제명이건 출당이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당으로선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출당 내지 제명을 시키더라도 두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이때문에 오히려 당 차원에서 꼬리자르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는 원론적 결과만 도출한 것에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 탈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선부르다는 시각도 일각에 존재한다. 문제는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의정활동은 '올스톱'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선 6월 마지막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은행, 국가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 현안 관계부처·기관들이 일제히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두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뉴시스는 의정활동 중단 및 향후 거취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은 오세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두 의원들이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진 탈당을 거부해 의원직은 유지하면서도 의정활동은 '올스톱'하는 데 대해 자연히 당 내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자신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대표가 사퇴했는데 적어도 의혹 당사자로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더민주 김성주 특보 "지역산업·인재육성 앞장"

"호남 정치적 기득권자가 못한 바퀴 입고 지역정서에 기대 승리한 역사 그대로 뒤선 안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0일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 내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으로 옷만 바뀔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호남특보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호남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호남은 정치적 소외와 경제 낙후의 대명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 지역차별과 산업과 과정에서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의 희생지역이 호남"이라며 "따라서 호남인들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으로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자연히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안공항과 새만금 신평항을 전남북 갈등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의도를 경계한다"며 "오히려 우리는 묻지마 토건경쟁과 SOC(사회간접자본)예산 확보전쟁에서 지역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에겐 참여정부 때부터 확립한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중심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과 전략이 있다. 전북은 탄소, 전남은 에너지, 광주·경주는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이 있었으며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산업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 우리는 배타적 지역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잘사는 균형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새누리 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413 총선 이후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 전당대회에 앞서, 올해년도 정기 시·도당대회를 이 날부터 이달 12일까지 개최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1일 도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대의원 선출 등 주요 절차 및 일정은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위원장 선출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등록 결과 단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김형술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도당대회 종료일 전일까지이며, 새로운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취임 이후 1년이 다. /고민형 기자

박지원 '당직자 소신있게 일하게 할 것'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사를 최소화해서 당직자들의 동요를 막고 소신있게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당의 시스템과 기풍을 다시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에 관해 "두 분은 국민의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안 전 대표의 세정지, 천 전 대표의 유능한 개혁정당 목표는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두 분의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수민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우리는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있는 그대로 위기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뉴시스